

결 정

2018 - 100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제주新보 발행인 오 영 수
2. 한라일보 발행인 강 만 생

주 문

제주新보 2017년 12월 12일자 5면 「“현 전 실장 지시로 元 도정에 부역”」 제목의 기사, 한라일보 12월 12일자 4면 「“원희룡 도정 부역 대가로 돈 받았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제주新보, 한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제주新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측근인 현광식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조창윤씨(59)가 1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씨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 간의 일들을 자작극으로 몰아 짓밟힌 자존심을 찾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부역자로 있는 기간 제 자신 책임질 일 있으면 손뚱만큼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2014년 3월 17일 원 지사와 첫 대면을 시작으로 제주의 구태 낡은 틀을 바꿔보려고 지난해 7월 31일까지 원 도정에 부역했던 조창윤”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조씨는 현 실장이 모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 화이트·블랙리스트 작성 ▲언론사 사찰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현직에 있는 고위 공무원 B씨의 도움을 받아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했고 실제 정기 인사에 반영됐다”며 “블랙리스트는 감사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실시한 자료를 토대로 80% 가량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 현 전 실장이 전화를 걸어와 A언론사의 비리를 취합해 투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하지만 사실이 노출되고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해 현 전 실장이 끝까지 조창윤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해 사이가 틀어졌다”고 밝혔다.

조씨는 ‘부역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9년 전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두손두발을 다들었다”며 “현 전 실장이 일자리를 준다는 것에 미련을 못 버려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조씨는 2015년 현 전 실장이 소개해 준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매월 250만원씩 11개월간 총 275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 돈의 의미에 대해 “쉽게 얘기해서 현 전 실장이 내 직장을 빨리 못 만들었다”며 “나는 처음에 B주택에 취업을 원했는데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B주택과 원도정의 관계가 불편해졌다” 밝혔다.

조씨는 “12일에 경찰에 출두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모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6610>

(한라일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전 비서실장 현모(54)씨가 공직사회 화이트·블랙리스트 작성과 언론사 사찰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논란의 장본인이라는 인물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창윤(59)씨는 11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씨가 건설업자를 통해 나에게 월 250만원씩 모두 2750만원을 지원했다”며 “이 돈은 현씨가 지시한 공직사회 화이트·블랙리스트 작성과 언론사 사찰 등 원희룡 도정에 부역하면서 대가성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2월쯤 현씨가 특정인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남겨진 메모지를 나에게 건네며 ‘전화를 하면 한달에 200만원 정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후 돈이 적다고 항의하자 지원금을 250만원으로 올리고, 조만간 직장도 알아봐주겠다는 조건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공직사회 화이트·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는 “현씨의 지시로 작성됐으며, 화이트리스트는 현재 제주도청 고위간부의 협조를 통해 만들어졌다”며 “블랙리스트는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 내가 80% 정도 만들어 현씨에게 건

냈다”고 말했다.

언론사 사찰에 대해서는 “2015년 현씨가 전화를 걸어와 J일보의 비리를 취합 하라고 지시했다”며 “하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현씨가 J일보에 ‘조창윤이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해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창윤씨는 “원희룡 도정에서 부역했던 사람으로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문제를 수습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12일 이뤄지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12973575581577044>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제주新보, 한라일보의 위 기사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공식사회 화이트·블랙리스트 작성과 언론사 사찰을 지시받았다는 조창윤씨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제주新보는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실명을 적시했고, 한라일보는 현모(54)씨로 표기했다.

기사에 따르면 조씨는 현 전 실장의 지시로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했고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이를 ‘원희룡 도정에 부역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 대가로 275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사 내용대로 현 전 실장이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당사자에게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원희룡 지사가 관여했는지도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기사 중 조씨의 발언은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현 전 실장이나 원 지사측의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함께 보도해야 하는데도 제주新보, 한라일보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3조 「보도준칙」 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김용담
위원	정승호	정승호	정승호
	장명국	장명국	장명국
	이동현	이동현	이동현
	장인철	장인철	장인철
	강희	강희	강희
	김영모	김영모	김영모
	박현갑	박현갑	박현갑
	박미경	박미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답변의 기회) 보도 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